

민주 “사법개혁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맨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개특위 회의… ‘검찰개혁 이행과정 점검’ 당정협의 추진 패스트트랙 자동 본회의 부의 28일…한국당 “90일 더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을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

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벌금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또한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최대 90일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 부의 시점은 이달 28일이 된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화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국감 브리핑

이정현 “4차산업혁명 대비 IT대사 신설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이정현(순천)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보기술(IT) 대사 신설 등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현지시간) 주(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이나 프랑스, 덴마크가 IT 대사를 두고 운영한다는데 IT 강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산업의 흐름이나 인제 육성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용 총영사는 “외교부 내에서는 외교 활동할 때 기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데 IT 대사가 신설되면 이



런 전문성을 확보하고 협상에서 자문받는 게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여한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이석현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 외통위 위원 5명은 최근 일본의 부품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과학 기술 외교 현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법인과 시스코를 방문해 현장 국감을 벌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인화 “공무원, 유튜버 겸직 허가 지침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국가공무원 2명이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겸직 허가를 받은 만큼 인사혁신처가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수익 등을 얻으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직무수행 영향이나 품위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무원 유튜브 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사혁신처 차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거나 활동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과 같이 영리행위 제한이 있는 교원들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교육부 차원에서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한 뒤 활동지침이 마련된 상태”라며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사례를 참고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와 공직사회 기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 기자 cki@

‘조국 장관 동생 영장기각’ 여야 시각차

여 “무리한 수사 제동”…한국당 “조국 왕국 수혜자”

여야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충분히 보여 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한·일 대화 열리나

수출 규제·지소미아 종료로 경색된 관계 돌파구 마련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二)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국간 사전 정치 작업이 필요하고, 변수도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물 밑 조율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에 직접 간다면 정부로서는 실익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총리보다 낮은 급의 인사를 파견한다면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적 결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왕 즉위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일왕 즉위식에 파견할 정부 대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일왕 즉위식에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갈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막말”…“대통령 불통” 여야, 한글날 논평 신경전

여야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 “부끄럽게도 정치권의 막말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말과 글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는 오늘들의 정치인들 모습을 실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으며 573년 전 세종대왕이 강조한 통치자의 기본, ‘애민’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